

현안과 과제

■ 민간 서민금융의 선순환 과제
- 제도권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해야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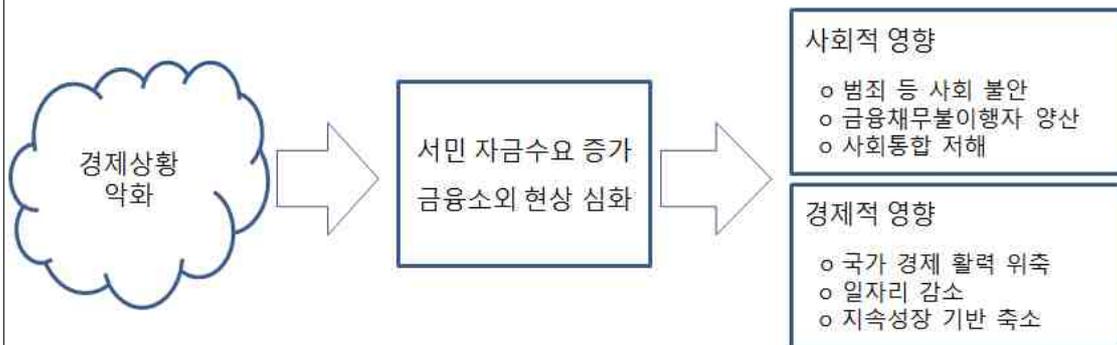
■ 서민금융의 현황과 중요성

서민금융이란 자금 규모가 작고, 담보능력이 떨어지고, 신용이 약한 저소득층 서민의 재산 형성, 주택마련 그리고 일시적인 자금부족 상태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금융을 말한다. 국내 서민금융은 카드대란 이후 만성적 초과수요 하에서 금융소외 계층의 민간의 일반 금융기관의 접근이 제약을 받으면서 주로 대부업과 다양한 정책성 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성적인 초과 자금수요에도 금융소외 현상을 방지하게 되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 등으로 사회통합에 치명적인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실물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동시에 지속성장 지속 기반이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경제 하부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서민금융의 역할이 절실하다.

최근 정부는 서민경제를 위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재정적 지원 보다 서민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민금융의 만성적인 초과수요 상황 하에서 장기적으로 민간 서민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금융소외의 사회적·경제적 영향 >



■ 민간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

(은행)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화된 은행들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민금융을 소홀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더욱 뚜렷해진 수익성·건전성 경영원칙 속에서 은행권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 추세로 인하여 6등급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은 새희망홀씨대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 2003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실화 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가계대출 금융지원이 매우 약화되었다. 2011년 대규모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 이후 저신용·고위험 고객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개인신용대출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본연의 서민금융과는 거리가 있다.

(상호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등의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은 외환위기 이후 불완전한 구조조정 등으로 영업기반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본래의 조합원 대상 서민금융의 역할이 위축되어 왔다. 금융위기 이후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풍선효과'로 인하여 빠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위험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등록 대부업) 2005년 법 개정 이후 등록 대부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이 소홀하였던 저신용자 금융소외에 주력하였다. 하지만 대부업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 연이은 상한금리 인하 등으로 인하여 중소형 업체의 퇴출, 대형 대부업체의 제도권 금융기관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다.

■ 금융소외자의 자금 수요 추정

우리나라에서의 서민금융은 보통 저신용층인 6 등급 이하에 대한 금융지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하나 금융소외를 받는 계층의 수를 신용 7~9등급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6등급의 경우 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 캐피탈 회사 등을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하고, 10등급의 경우 불량률이 너무 높아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였다.

2014.3.31 기준 NICE신용평가정보의 7~9등급은 전체의 12.8%인 506만명으로 추산된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인당 평균 자금수요를 1,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신용 7~9등급 저신용자의 자금수요는 50.6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이중 정책성 서민금융과 기존 대부업의 서민금융 지원을 제외하면 7~9등급 저신용자의 초과 자금수요는 2014년 현재 약 39.4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 활성화 과제

정책 서민금융의 효율성 강화뿐만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바, 금융기관별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은행권**의 비중이 매우 높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간 서민금융이 정착할 때까지 사회망홀씨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영원칙 차원에서 직접 접근하기 어려울 경우 서민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또는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서도 서민금융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축은행**의 경우 규모와 건전성 별로 차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 서민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성을 활용하여 지역밀착 서비스 및 틈새 시장 상품개발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상호금융기관**들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본연의 대출에 집중하고, 중앙회의 업무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수익기반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가계대출 위험증가에 대한 과학적인 리스크관리도 요구된다. **넷째, 등록 대부업**의 경우, 카드사태 이후의 금융소외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할 면을 평가하여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난 위치에서 단기 신용대출 위주의 서민금융을 영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정조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회사채 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인하하여 금리 경쟁력을 스스로 갖출 필요가 있다.

1. 서민금융의 현황과 중요성

- (개념) 서민금융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으로서,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나름대로 일반 금융을 통해 서민금융의 취급이 가능함
 - 서민금융이란 일반적으로 자금 규모가 작고, 담보능력이 떨어지고, 신용이 약한 저소득층 서민의 재산 형성, 주택마련 그리고 일시적인 자금부족 상태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금융을 일컫음
 - 서민을 통상 복지 측면을 강조할 경우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 측면을 강조할 경우 5분위 중 1~2분위 계층, 신용등급 측면을 강조할 경우 10등급 중 6등급 이하로 정의(금융위원회 2014.7.16자 보도자료)¹⁾
 - 편의상 신용등급 6~10 등급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일컫는 경향이 높음²⁾
 - 현재 대부분의 국내 금융기관에서 민간 서민금융 취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실제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영역에는 차이가 큼
 - 통상 서민금융의 주체는 금융기관 등에 의한 민간 서민금융과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으로 구분
 - 국내 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정책성 신용대출(새희망홀씨대출 등) 취급을 제외하고는 주로 5등급 이내의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2금융기관들이 주로 서민금융을 취급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

< 서민금융의 구조 >

민간 서민금융 (금융기관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대부업체 - 기타(여전회사 등)
정책 서민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소금융 - 햇살론 - 새희망홀씨대출 - 바뀐드림론 등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민간 서민금융 체계 >

지원창구	주요지원대상 (신용대출 기준)
은행	신용 1~3등급
저축은행	신용 5~9등급
상호금융	신용 2~6등급
대부업체	신용 7~10등급
기타 (여전회사등)	신용 4~7등급

자료 : 금융위원회(2011.7).

1) 향후 출범될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서민'은 일반적인 서민이 아니라, 금융측면에서 은행 등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분'들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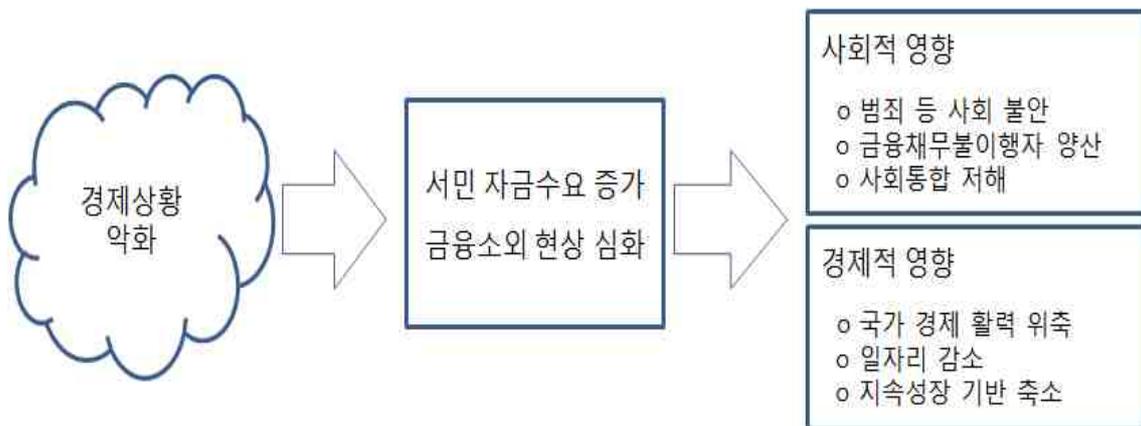
2) <별첨 1> 참조.

- (현황) 국내 서민금융은 카드대란 이후 만성적 초과수요 하에서 금융소의 계층의 민간의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제약을 받으면서 주로 대부업과 다양한 정책성 금융에 의존하고 있음
 - 대부업법 제정 이후 본격화된 등록 대부업을 중심으로 금융소의 저신용자의 자금공급을 확대하였지만 역부족
 - 국내 서민금융시장은 카드대란 이후 제도권 금융기관의 여신정책이 보수화되고 수익성을 추구함에 따라 만성적인 초과수요 상태로 진입
 -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의 고금리 및 불법 추심에도 불구하고 등록 대부업들은 국내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
 - 2013년말 현재 약 250만명을 대상으로 10조원을 넘는 자금을 지원하였지만 최고금리 인하,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한계에 직면
 - 2010년 이후부터는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등 정책성 서민금융이 서민 자금 초과수요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3)
 - 통상 서민금융의 주체는 금융기관 등에 의한 민간 서민금융과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으로 구분
 -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적 서민금융이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내포
 - *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담보로 하여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상품
 - * 새희망홀씨대출은 은행권 영업이익의 약 10% 내외를 자체재원으로 조달해 11~14%의 금리로 서민에게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상품
 - * 미소금융은 저신용·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금융재단에서 저금리로 대출하는 서민금융상품
- (중요성) 금융위기 후 심화되고 있는 금융소의 현상을 방치할 경우 나타날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우려하여 서민금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금융소의 현상을 방치하게 되면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 등으로 사회통합에 있어 치명적인 저해요소로 작용
 - 불법 사채업자들에 의한 불법 추심행위가 일어나거나 채무상환을 위한 범법 행위가 일어날 경우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큼

3) <별첨 2> 참조.

- 금융소외의 증대는 또한 실물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동시에 일자리를 감소시켜 지속성장 기반이 위축
 - 서민경제 위축으로 소비 및 투자 위축이 지속되면서 국가 경제의 활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금융채무증가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신용불량을 양산시키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사회전체의 인적 자원 손실 등을 초래하면서 지속 성장 기반이 잠식
- 금융위기 이후 경제 하부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세수의 증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보다 금융의 역할이 강조
 -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금융소외의 사회적·경제적 영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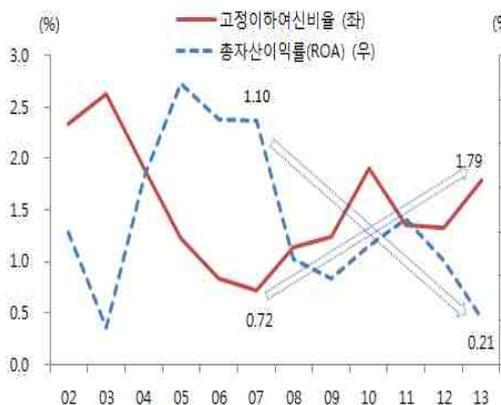
- 서민금융의 만성적인 초과수요 상황 하에서 장기적으로 민간 서민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여기서는 민간 서민금융의 약화 원인을 살펴보고, 금융소외자의 자금수요 를 추정하고, 서민금융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 과제에 대해 살펴봄

2. 민간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

○ (은행) 수익성 및 건전성 등이 악화되는 추세 속에서 경영원칙이 강화된 은행들이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축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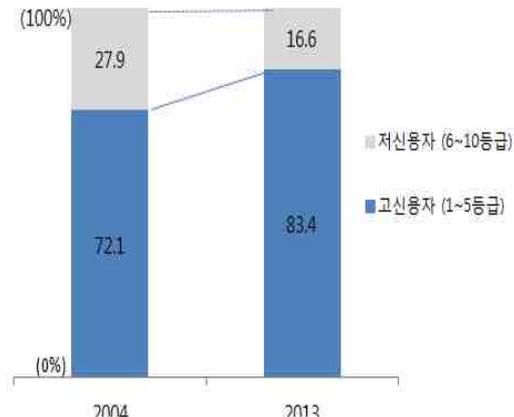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 건전성 등의 경영원칙이 강화된 데다 최근 수익성·건전성 악화되면서 민간 서민금융 기능이 약화
 - 외국계화된 은행들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확대시키고, 수익성 극대화를 위하여 부유층 시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민금융을 소홀
 - 최근 자기자본이익률(ROA) 하락과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 추세 속에 더욱 강화된 은행의 경영원칙이 금융배제를 확대시키는 작용
- 금융위기 이후 더욱 뚜렷해진 경영원칙 속에서 은행자금을 통하여 6등급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은 축소됨
 - 국내은행의 신용등급별 저신용자(6~10등급)의 비중은 2004년 27.9%였지만 2013년에는 16.6%로 11.3%p 하락한 반면, 그만큼 고신용자(1~5등급)의 비중은 상승
 -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이 더욱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6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담보대출과 정책성 새희망홀씨대출 정도만을 취급하는 실정이며, 신용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국내은행의 수익성·건전성 >



자료 : 금융감독원.

< 국내은행의 신용별 가계대출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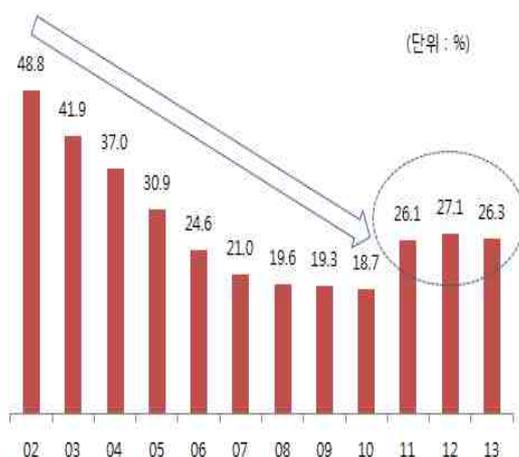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

주 : 담보대출 및 정책대출 포함.

-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등을 추구하면서 2002년 이후 추세적으로 신용대출 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며, 대출 금리도 매우 높은 수준임
 - 2003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가계신용대출 지원이 크게 약화
 - 저금리 및 부동산 부문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PF대출, 건설업 및 임대업 등 부동산관련 대출 확대(2010년 부동산 PF 대출은 총대출 대비 19%인 12.2조원)
 - 이후 무리한 외형확대, 대주주 불법행위, 예기치 못한 정책부작용 등으로 부실화(2010년 부동산PF 연체율은 25.1%를 기록)됨에 따라 2011년 초부터 대규모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PF대출 비중이 감소⁴⁾
 -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의 민간 신용대출은 저신용·고위험 고객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금리로서 본연의 서민금융과는 거리가 있음
 - 2010년 이후의 신용대출은 대부분 지역신용보증에서 90~95%의 보증 비율로 지원하는 정책성 햇살론 취급 증대
 - 2012~13년 신용등급 5~9등급의 저신용자에게 25~39%의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특히 저신용자 소액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대부업 금리 수준과 비슷한 약 35% 금리를 적용

< 저축은행 신용 대출 비중 >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신용대출비중=신용대출/(신용+담보)대출

< 금융기관별 신용대출 금리 >

	주요 지원대상	금리 수준
은행	신용 1~3등급	5~14%
상호금융	신용 1~3등급	10~25%
여전회사	신용 1~3등급	20~35%
저축은행	신용 1~3등급	25~39%
대부업체	신용 1~3등급	35~39%

자료 : 금융감독원.

4) 당시 PF대출 비중 감소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PF대출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정 기간 후 다시 사들인다는 풋백옵션을 가지고 잠정 매각한 것이 크게 기인함.

○ (상호금융기관) 영업기반이 약화되면서 신탁 등 상호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기능이 약화되고, 최근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이 커지고 있음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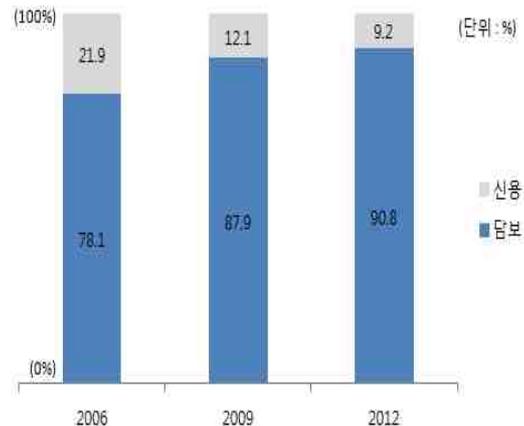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불완전한 구조조정 등으로 영업기반이 취약해지면서 본래의 조합원 위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 역할이 위축
 - 주로 가계금융을 영위하는 신탁의 경우 경제가 안정된 2002~2013년 평균 총자산이익률(ROA)은 0.49%에 그치고,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매우 높은 0.46%임(이는 같은 기간 일반은행 평균 ROA 0.65% 보다 낮고, 고정이하여신비율 1.53% 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
 - 거액 대출비중이 확대되고,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예대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
-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으로부터의 '풍선효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부동산가격하락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과거와 같은 자신의 조합원에 대한 신용대출이 축소되는 대신 지역금융기관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담보대출이 확대⁶⁾
 - 은행과 달리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의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만 담보인정 비율 규제가 적용

< 신탁의 수익성·건전성 지표 >



자료 : 금융감독원.

< 신탁의 대출 구성 >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 방안(2003.11).

5) 국내 상호금융기관으로는 농수산림협동조합(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신탁)의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로 구성.
 6) 2009년 비과세예금의 한도 확대 및 상대적으로 높은 수신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수신 증가율 확대입도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등록 대부업) 저신용자 대상 금융소의 해소에 주력했던 등록 대부업이 최근 연이은 최고금리 규제 등으로 등록업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급여력이 약화되고 있음

- 불법 사금융관련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양성화를 위한 대부업법이 제·개정된 이후 급성장한 등록 대부업이 저신용자의 단기자금 공급에 주력
 - 등록대부업체의 대출금액(잔고기준)은 상위 10사(자산기준)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어 약 5.9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빠르게 증가
 - 등록 대부업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등한시했던 저신용자 대상의 신용대출을 확대(2012년 신용 7~10등급 중에서 대형 대부업체 이용 비율이 65.6%이고, 은행비은행(주택담보대출 제외) 이용 비율이 18.3%에 그침)
-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 연이은 상한금리 인하 등으로 중소 대부업체의 위기, 대형 대부업체의 제도권 금융기관화 등으로 공급 능력의 위축이 예상
 - 2007년 10월 이후 49%로 유지된 등록 대부업체 법정 상한금리가 2010년 7월 44%, 2011년 6월 39%, 2014년 4월 34.9% 등 연달아 하락
 - 조달비용을 줄일 수 없는 중소형 등록 대부업체들의 퇴출이 속출하면서 대부업체 수가 2006년 12월 17,210개에서 2013년 12월 9,326개로 감소
 - 2014년 들어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등 서민금융시장에 과거에는 생각도 못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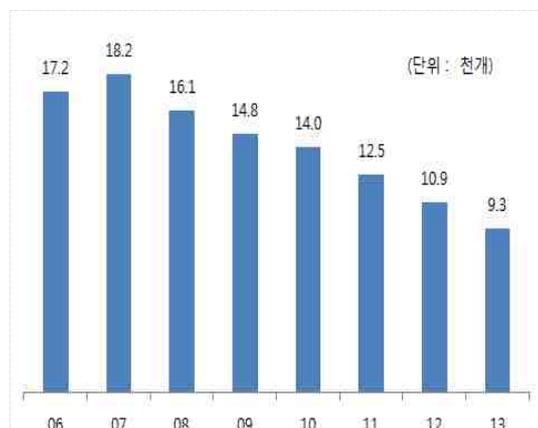
< 대부업과 은행·비은행 이용자의 신용등급 비중 >

(단위 : %)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	은행·비은행 비주택담보대출 이용자
1~6등급	31.2	81.7
7~10등급	65.6	18.3
기타	3.2	
합 계	100.0	100.0

자료 : 금융감독원(2012), 「2011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

< 등록 대부업체수 추이 >



자료 : 금융감독원.

3. 금융소외자의 자금수요 추정

○ 2014년 현재 민간 서민금융이 가능한 신용 7~9등급 금융소외자는 약 506만 명으로 추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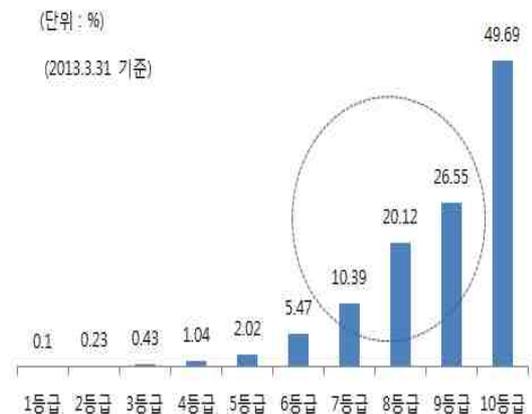
- 저신용자 중에서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하나 금융소외를 받는 계층의 수를 신용 7~9등급으로 가정
 - NICE신용평가정보에 의하면 2014년 3월말 기준 국내 저신용자(신용 6등급 이하)는 전체 신용등급자의 약 15.2%인 653만명
 - 하지만 실제로 6등급의 경우 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 캐피탈회사 등을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하고, 10등급의 경우 불량률이 너무 높아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
- 2014.3.31 기준 NICE신용평가정보의 7~9등급은 전체의 12.8%인 5,067,187명으로 추산
 - 물론 7~9등급도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이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소수이며 대부분 접근성과 금리 측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음
 -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상환 의지가 높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는 충분히 가능

< 신용등급별 인원 >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

< 신용등급별 불량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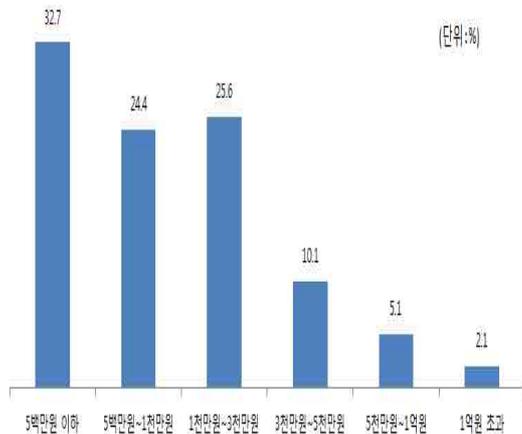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

주 : 기준시점 12개월간 은행연합회 불량기록자 비중.

○ 2014년 3월말 현재 약 506만명의 신용 7~9등급 금융소외자의 자금수요는 약 39.4조원으로 추정됨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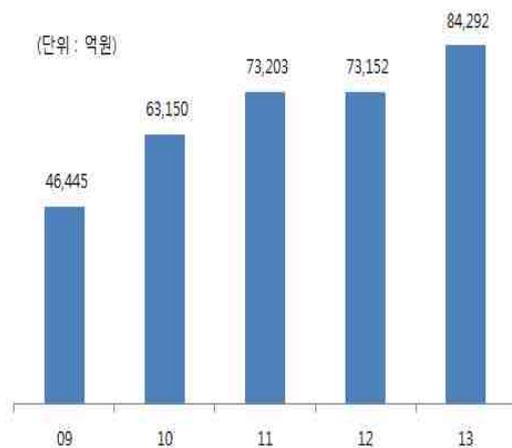
- 신용 7~9등급 저신용자의 자금수요는 50.6조원(= 506만명 × 1,000만원)
 - 주로 신용 7~9 등급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상 사회생활 복귀에 필요한 자금은 3천만원 이하가 전체 82.7%를 차지하고 있어 1인당 평균 자금수요를 1,000만원으로 가정
 - 506만명 × 1,000만원 = 50.6조원
- 이중 정책성 서민금융과 기존 대부업의 서민금융을 제외한 신용 7~9등급 저신용자의 초과 자금수요는 약 39조원 정도로 추정
 - 최근 3년간 정책성 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한 지원은 약 9.1조원, 대부업체의 경우 등록 대부업체의 최근 3년간 신용대출은 약 2.1조원 (2013년말과 2010년말 잔액 차이)임⁸⁾
 - 따라서 서민금융 부족자금은 39.4조원(= 50.6조원 - (9.1조원+2.1조원))

< 정상 사회생활 복귀 필요 자금 >



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2014.5).

< 등록 대부업체 신용대출 잔액 >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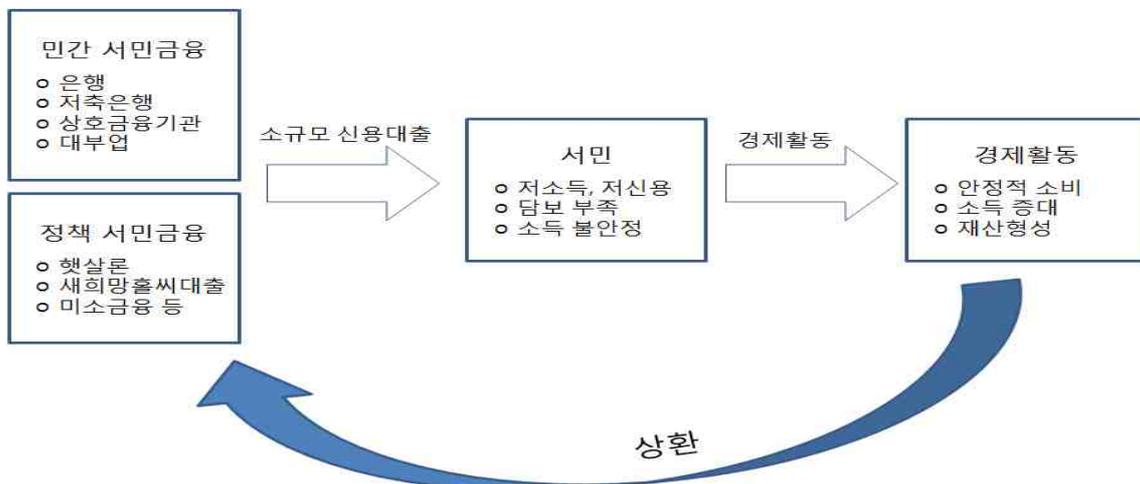
7) 금융소외의 자금 추정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 제한되어 있는 신용 7~9등급자의 자금수요에 최근 3년간 정책 서민금융과 등록 대부업 지원을 제외하고 계산된 것임. 단,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등이 최근 증가시킨 저신용자 대출은 소액이기 때문에 계산에서 제외하였음.

8) 일반적으로 단기 금융대출의 만기가 3년 이내인 바, 최근 3년간을 금융거래를 분석 대상으로 함.

4. 시사점 : 민간 서민금융 선순환 과제

- 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 서민금융의 효율성 강화뿐만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책성 서민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함
 - 상품알선, 고용·복지 연계, 종합상담 등 자활지원을 위한 서민형PB 기능을 강화하고, 복잡한 서민금융 상품을 햇살론으로 일원화하면서 다양화
 - 서민금융 상품 성실상환자의 제도금융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동태적 지원
 - 채무자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마련
 - 한 자리에서 모든 서민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 거점센터를 구축
 -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종합적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
 - 금융기관에 의한 서민금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근본적으로 서민금융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서민금융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 시급
 - 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세수의 증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성 서민금융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 효율적인 일반 금융시스템을 통한 서민의 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이 중장기적으로 일반 서민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

< 서민금융의 선순환 구조 >



○ 민간 서민금융 선순환을 위해 금융기관별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 (은행)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권의 비중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는 민간 서민금융이 정착될 때까지 은행의 자발적 서민금융 역할이 중요
 - 은행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BIS비율 준수 등 국제적인 정합성이 이미 확립된 상황에서 새희망홀씨대출 등을 보다 확대할 필요
 - 뿐만 아니라 은행 차원에서 직접 접근하기 어려울 경우 서민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또는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서도 서민금융 역할을 확대할 필요
- (저축은행) 규모와 건전성 별로 차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서민금융 활성화 절실
 -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대부분의 중소 저축은행들은 자본 확충과 구조조정 후 지역 서민과 자영업 등을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재탄생
 -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성을 최대로 활용하여 서민맞춤대출서비스(이지론) 등과 같은 지역밀착 서비스 및 틈새시장 상품 개발
- (상호금융기관) 본연의 조합원 대출에 집중하고 중앙회의 수익기반 확대 및 통계에 근거한 과학적인 경영 시스템 구축이 절실
 -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본연의 대출에 집중하고, 중앙회의 업무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수익기반을 다원화할 필요
 - 과학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내부자료, 정보수집 기관 자료 등 자료의 체계적인 축적이 매우 중요
- (등록 대부업) 2000년대 이후 금융소외 해소에 큰 역할을 한 것을 평가하여 여타 금융기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단기 신용대출 위주의 서민금융을 영위하도록 제도를 개선
 - 특히 2007년 이후의 등록 대부업은 그 어느 일반 금융기관도 하지 못하였던 무담보 단기 서민금융에 집중하면서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금융소외 해소에 크게 기여
 -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비용 구조로는 수익구조를 확보하기 어려운바, 일정조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주식 및 회사채 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dbpark@hri.co.kr, 2072-6216)

< 별첨 1 > 신용등급의 의미

구분	특징
1~2 등급 (최우량)	- 오랜 우량 신용거래 경력 -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낮음
3~4 등급 (우량)	- 우량거래 지속시 상위등급 진입 가능 - 부실화 가능성이 낮은 수준
5~6 등급 (일반)	- 저신용업체와의 거래, 단기연체경험 - 신용관리에 주의가 필요
7~8 등급 (주의)	- 다수의 저신용업체 거래, 단기연체경험 - 단기적인 신용도 하락 예상, 주의 필요
9~10 등급 (위험)	- 현재 연체 중,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 - 매우 높은 부실화 가능성, 관리 필요

자료 : 각 CB(Credit Bureau)사 자료 정리.

< 별첨 2 > 국내 대표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요약(2014.4)

구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대출 대상	7~10등급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6~10등급(4천만원이하) ·연소득 3천만원이하	6~10등급(4천만원 이하) ·연소득 3천만원이하	6~10등급(4천만원 이하) ·연소득 3천만원이하	
이자율	연 2~4.5%	연 12% 이하 (보증료 1% 포함)	연 12% 이하	연 12% 이하 (은행이자 5.5%+보증료) ※ 11.12부터 0.5% 인하	
취급 기관	미소금융재단	서민금융회사 (지역신보 보증)	은행	은행 (국민행복기금 보증)	
대출 한도	운영자금 : 2천만원 창업자금 : 7천만원 무등록사업자 : 5백만원	긴급생계 : 1천만원 운영자금 : 2천만원 창업자금 : 5천만원 대환자금 : 3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전환한도) ※ 13.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4천만원까지 확대	
대출 실적 누계	기간	'08.7월~'14.4.30	'10.7.26~'14.4.30	'10.11.8~'14.4.30	'08.12.18~'14.4.30
	금액	12,184억원	50,169억원	61,228억원	21,798억원
	건수	131,348건	561,381건	652,113건	205,697건

자료 : 금융위원회(2014.7).